



보도 일시	2022. 12. 13.(화) 09:00	배포 일시	2022. 12. 13.(화) 09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	책임자	과 장 박지훈 (044-215-4220)
		담당자	서기관 오미영 (ohmiy@korea.kr)

##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① 금번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- IMF,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\*하고 있습니다.

\* (OECD) '17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 (IMF)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 제고 필요

-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%, 20%, 22%, 25%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.

과세표준(단위: 억원)	현 행	「정부 개편안」	
~ 2	10%	10% (중소·중견기업)	20%
2 ~ 5	20%		
5 ~ 200	22%		
200 ~ 3,000	25%		
3,000 ~			22%

- OECD 회원국들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,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인데,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입니다.

-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,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.

-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,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할 것입니다.

※ '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은 '17년 138개→'21년 125개로 감소한 반면, 회사분할은 '17년 47개→'21년 57개로 증가하는 추세

☞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\*은 '18년 25%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하였고,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하여 39위가 되었습니다.

\* IMD(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발표, '22.6): OECD 등 63개국 평가  
(조세정책) '17년 15위→ '22년 26위(11단계 ↓), (법인세 세율) 27위→ 39위(12단계 ↓)

②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.9%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습니다.

-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.5%('20년)는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며, 이는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.
-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(외국납부세액)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합니다.
- '21년 전체기업의 실효세율(외국납부세액 포함)은 18.8%이며,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.9% 수준입니다.

<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(% , 외국납부세액 포함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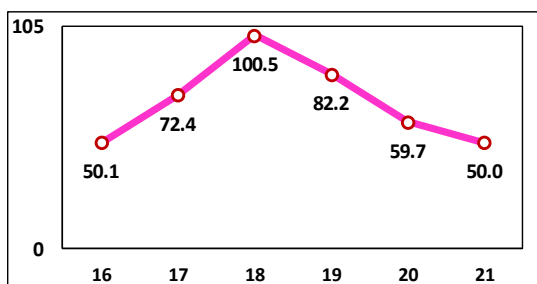
신고연도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
전체기업	17.1	17.2	17.7	17.8	18.1	18.4	19.7	18.8	18.8
중소기업	12.5	12.6	12.7	12.9	13.0	13.6	13.5	13.3	13.5
대 기 업	18.5	19.0	19.5	19.7	20.0	20.1	22.3	21.8	21.9

<참고> 조세재정연구원 분석('22.5.)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효세율(지방세 포함)은 '19년 21.4%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. 세부담이 높으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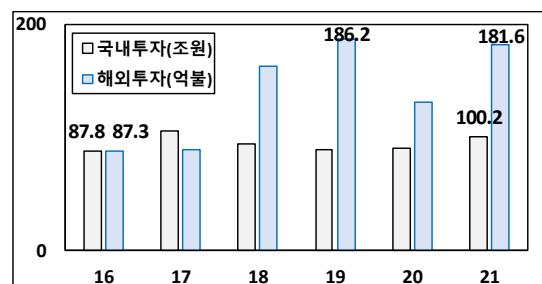
\* 한국 21.4%, 미국 14.8%, 일본 18.7%, 영국 19.8%

- '18년 법인세율 인상(22%→25%)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.

외국인 제조업 국내 직접투자(억불)



내국인 제조업 국내외 투자(조원, 억불)



③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제는 ‘국가의 얼굴’입니다.

-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,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, 세액공제, 법인세 인하,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습니다.

\* (예)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1%로 인하,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5년간 520억불을 지원하고, 전기차에 7,500불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

- 특히,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.

-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.5%로서 OECD 평균(21.2%) 보다 3%p 이상 높고,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습니다.

- 홍콩(16.5%), 싱가포르(17.0%), 대만(20.0%) 등 우리와 경쟁 관계인 아시아 주요국에 비하여도 현저히 높습니다.

- 해외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합니다.

- 외국인근로자\* 19% 단일세율과 짝을 맞추어,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.

\*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(5년→10년), 외국인 경영자 19% 단일세율 적용

- 우리 글로벌 기업도 핵심기술을 선점하고,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.

-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·부품·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게도 온기\*가 되고, 주주·종업원·정부(세수 증가) 모두가 수혜자가 됩니다.

\* 반도체 A社 1,300여개, 완성차 5개社 740여개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는 업종에 따라 수십개에서 수천개로 조사됨